

데스크 시각

공천하(共天下)



홍행기 정치부장

사람이 모여 살아가는 모습은 언제 어디서든 별반 달라지지 않는가 보다. 겉도 속이여 첨단 과학기술 발전으로 상진벽해를 이뤘지만 사회를 이루고 꾸려가는 '사고의 틀'은 특별히 변할 게 없으니, 역사적인 상황도 주인공만 다를 뿐 비슷한 상황이 두고두고 되풀이되곤 한다.

지금 우리 정치판에서 펼쳐지고 있는 각종 정략들도 과거의 역사 속에서는 전혀 드문 일이 아니다. 부정적으로 본다면 '음모'라고도 할 수 있는 정략은, 달리 말하자면 상상력 또는 기획력의 산물이기도 하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이 '문·안·박 3총체제'라는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 역시 이웃 중국의 역사에 나오는 '공천하(共天下)'라는 정략을 떠올리게 한다.

천하를 나누어 소유하다

갑작스러운 패배에 당황한 유방이 책사인 장량에게 물었다. "제후들이 내 말을 따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장량은 이에 "이전에 초나라 군사를 격파하고 도두 사람이 아직 땅을 나누어 받지 못했으니 그들이 오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과 천하를 함께 나누어 소유(공천하)할 수 있다면, 그들을 즉시 이곳에 도착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답한다.

유방이 다시 계책을 묻자 장량은 "팽월에게 땅을 주어 왕으로 삼고, 한신에게도 많은 땅을 주십시오. 큰 땅을 그들에게 주어 각기 초나라와 싸우게 하면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제안한다. 유방은 이를 따랐고, 한신과 팽월은 과연 군사를 이끌고 도착했다. 항우

가 해하(垓下)에서 유방·한신·팽월의 군사에게 대패한 뒤 오강으로 도망갔다. 결국 자결함으로써 초한전쟁(楚漢戰爭)이 막을 내린 것은 그로부터 불과 두 달 뒤의 일이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제인 대표가 당내 통합과 혁신 및 총선 승리를 명분 삼아 제안한 '문안박 체제'의 내용을 보면 장량이 기획한 '공천하'의 그것과 판박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문 대표만으로는 총선에서 승리할 수 없는' 상황은, 유방 혼자서는 항우를 이길 수 없는 당시 여건과 유사하다. 또 문 대표가 안철수 전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당권을 나눠 주려 한 것과는, 유방이 한신과 팽월에게 큰 땅을 내준 상황과 비슷하다.

올바른 상황 인식이 먼저

하지만, 문 대표가 제안한 '문안박 체제'는 장량이 주도한 '공천하'와는 달리 안 전 대표의 거부로 결국 무산됐다. '통합과 승리를 위해서'라는 명분을 걸고 '권한'을 나눠 주려 했지만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온 셈이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문 대표의 상황 인식이 지나치게 안일했고, 결과적으로 기획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우승 아이에게 떡 하나 던져 주는' 식으로, 중도·비노 세력에게 '이권'만 나눠 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다. 문 대표가 지난달 18일 광주에서 '문안박 체제'를 제안하면서 "저를 흔드는, 끊임없이 우리 당을 분란 상태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런 분들도, 실제로는 자기의 공천권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은, 당내 반발을 이해타산의 결과로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안 전 대표는 지난달 29일 '문안박 체제'를 거부했다. 유방이 땅을 나눠 준 것처럼 당권이나 공천권을 나눠 주면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사실상 문 대표의 현실 인식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또다시 격랑에 휩쓸린 새정치민주연합은 급기야 '야권 재편'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호남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심장부다. 하지만 지금 당에 대한 호남민의 무한한 관심과 애정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총선까지는 4개월여가 남았을 뿐이다. 어떠한 정략이든 상황 인식이 먼저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은 문제인 대표의 올바른 상황 인식이 시급해 보이는 시점이다.

/redplane@kwangju.co.kr

기고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 활동을 돌아보며



임내현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주 북구을

2013년 6월 아베정권의 우경화, 군국주의 옹호 발언이 노골화되면서 '동북아 역사왜곡 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5차례에 걸쳐 아베정권의 군국주의화, 위안부 및 강제동원 왜곡 등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40여 회의 전체회의와 간담회를 열어 일본의 군함도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시도에 대한 대책 마련, 독도영유권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미비한 대응 질타, 우리 역사학계에 아직도 자리 잡은 식민사관 문제 등을 검토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동북아특위의 여러 성과 중 '한국관련 오류, 역사왜곡 정보 시정활동 민간 협력 네트워크 구성'을 꼽을 수 있겠다. 지난 10월 반크(VANK)의 박기태 단장이 특위에 출석하여, 그동안 반크가 진행한 우

리 역사와 영토의 오류시정 활동에 대해 소개했다. 반크는 1999년 설립 이후 13만 명에 달하는 사이버 외교관과 홍보대사를 배출해 온·오프라인에서 발견한 우리 영토와 역사에 관한 오류를 민간차원에서 시정해 왔다. 특위 위원으로서 그동안 국회와 정부가 반크의 활동에 무심했음을 반성하고, 정부에 민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 인간의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정부 자체의 오류 시정활동 방향에 대해 권고했다.

특위에서의 지적과 제안으로 인해 정부는 국무총리실과 외교부, 교육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한국관련 오류시정민·관 협력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위원회는 민간단체 및 시민 참여를 통한 자발적인 오류 발굴 노력과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오류 대응 시스템 연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위원회가 각 부처의 선제적 대응을 이끌어내고, 민간의 열의와 자원을 적절히 분담하여 우리 역사와 영토의 여러 오류를 고쳐나가고 바른 정보를 알리는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 무엇보다 동북아특위에서도 이 위원회가 더욱 끊임없는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난 27일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에서는 김신 동해학술원 원장의 연구를 청취했다. 김신 원장은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포츠담 선언 하의 일본법령과 현행 일본법령을 연구하여 일본법이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 '일본법이 증명하는 한국령 독도'를 출간했다.

독도영유권에 관해 역사적 자료로 우리 영토임을 증명한 문서와 지도는 다수 존재한다.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가 8월 국회에서 '광복 70주년 기념 독도자료 전시회'를 열었을 때 '대정관지령'을 비롯한 일본측 고문서와 고지도가 공개됐다. 조선 고지도인 해조전도, 독도를 조선 영토로 처음 표기한 유립 지도 역시 전시되었다.

우리 외교부는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임을 역사적, 국제법적, 지리적으로 분명하다. 대한민국은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다. 독도에 대해서 어떠한 영유권 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독도를 끊임없이 분쟁지 역화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독도의 영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왜곡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지난 회의에서 김신 원장은 일본의 영

토를 규정한 '독도 포츠담이론'의 28개를 포함한 33개 법령 중 독도가 한국령임을 증명하는 법령은 31개 법령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독도를 단순히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호적법에서 조선, 대만과 함께 독도의 국적을 국으로 지정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이것은 독도영유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밝히는 학술적 증거가 된다.

김신 원장이 밝혀낸 법령과 같은 학술적 증거들이 학자들의 연구성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증하고 받아들여 우리 국민과 해외 학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는 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동북아역사재단 등 역사 연구기관과 교육부, 외교부 등에 전달해 왔다. 이런 성과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본과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동북아역사왜곡대책위원회 간사로 활동한 지 1년 반을 넘어서고 있다. 이제 특위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백서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 성과도 있었지만 아직 미진한 부분이 남아 있다. 일본과 중국의 역사 왜곡 시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음 국회에서는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가 상설 특위로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은편칼럼

환자들은 쉬고 싶다



심상돈 동아병원 원장

회진을 하다 보면 종종 '면회사절'이라는 문구가 병실문에 걸려있는 것을 본다. 병실문을 두드려 회진하는 것조차도 미안해진다. 그동안 우리는 가족, 친척, 평소 알고 지내던 주변사람이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병문안을 가서 인사하고, 마음을 전하는 것을 반드시 지켜야할 미덕으로 여겼다. 특히 집안의 어른이나 직장의 상사라면 병문안을 가지 않는 것은 거의 불경죄에 해당할 정도였다.

그러나 과거 신종플루가, 그리고 몇달 전 중동호흡기 증후군(MERS)이 유행할 때에는 병원으로 향하던 발걸음이 싹 사라졌다. 환자를조차도 병원에 오는 것을 꺼릴 정도였다. 병원에 와서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병을 얻어갈 수도 있다는 걱정이 병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돌렸을 것

이다. 이제는 병문안이 환자의 치료와 회복에 꼭 필요한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27일 중동호흡기 증후군을 확산시킨 계기가 되었던 입원환자의 병문안을 줄여나가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의료계, 학회 등의 의견을 모은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기준' 권고문을 발표했다.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후속 조치로 운영 중인 '의료관련감염대책 협의체'가 나서서 병문안 기본 수칙 및 허용 기준 등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기본원칙은 병문안 자체를 자제하는 것으로 병문안이 환자 치료나 회복에 바람직하지 않고 환자나 병문안객 서로에게 감염의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 국민 스스로가 병문안 자체를 줄여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필요한 병문안을 위한 기준으로 일일 병문안 허용시간대, 병문안 제한이 필요한 사람, 준수 수칙이다.

병문안 시간대는 평일에는 오후 6~8시,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10시~낮 12시와 오후 6~8시로 '공통기준 방문시간'을 정하여 전국 어느 의료기관에서나 동일한 시간에 병문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병문안객을 대상으

로 일일이 해당여부를 확인하지는 뜻은 아니다. 준수 수칙으로 병문안객은 의료기관의 출입 전후에 반드시 손을 씻고 기침예절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의료기관은 병문안객이 손을 씻고 소독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춰야 하며 꽃, 화분, 애완동물, 외부 음식은 반입하지 말라고 권고하였다.

세 번째는 병문안객 명부작성이다. 입원실이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병상에 환자별 병문안객 기록지를 두어 병문안객이 스스로 작성하고 대부분의 감염성 호흡기 질환의 잠복기가 30일 미만으로 퇴원일로부터 30일까지 보관 후 파괴하는 것으로 권고 하였다. 이는 유사시 역학조사를 위한 최소한의 단서 확보 차원을 위한 것이다.

네 번째는 의료기관 상시 출입자 관리와 범죄화 방안이다. 의료기관을 상시 출입하는 사람(의료기 납품업체, 세탁물처리업자, 영업사원), 환자 간병인, 직간접 고용인력(정소, 환자이송, 조리 등)에게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출입증의 교부와 관리를 권고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지금까지의 병문안은 '문화'였다. '문화'를 '법'이나 '규정'으로 바꾸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환자 안전과

전염병 관리 등 우리 사회 의료시스템의 한단계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므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과거에도 환자안전 뿐만 아니라 병원 직원을 포함하여 병원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의 안전이 중요하였으나 개인의 노력으로 조심히 하고 해결해야 했다. 이제는 개개인의 주의와 노력이 아닌 의료시스템의 변화로 '의료문화'를 바꿔 나가야 한다.

아파서 입원했는데- 아파서 쉬고 싶은데 오죽하면 면회사절일까? '면회사절'이라는 개인의 적극적인 방어 보다는 이제 병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병문안이 환자 안전과 나를 포함한 병원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의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의식의 변화가 '의료문화'의 변화로 이어진다. 이런 변화들의 요구기관만 떠 맡겨서는 안된다. 시민단체와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정부, 전 사회적 노력과 치밀한 준비로 이번 권고안을 지키고 또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

은편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편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社說

한중FTA 기금 '언발에 오줌 누기' 안 되도록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업 업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상생기금 운영을 놓고 우려가 많다. 기금이 제대로 조성될지 불투명하고, 배분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또한 마련돼 있지 않아서다.

여야정 협의체는 최근 1조 원 규모의 상생기금 조성에 합의했다. 기금은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 원씩 10년간 조성하게 된다. 관리·운영주체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농어촌 주거생활 개선사업, 농수산물 상품권 사업 등을 추진한다.

그러나 모금 방식부터 애매하다. 수혜기업이나 공기업 등이 알아서 기금을 내놓도록 한다는 것이어서 어느 기업이 얼마만큼 출연할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연간 목표에 못 미치면 정부가 총량 방법을 강구한다는 방침이지만 기금 마련이 순탄치 않을 것임

을 예고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농민단체들은 자발적인 모금에 한계가 있다며 무역이득 공유제를 법으로 만들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기업들이 반대하고 정부와 국회는 비준을 서두르는 바람에 두루뭉스러가 되고 말았다. 새로운 준조세라며 일부 재계에 서도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지원의 성과도 장담하기 어렵다.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을 앞둔 1992년부터 지금까지 농림 투·융자는 100조 원이 넘는다고 한다. 하지만,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게 중론이다. 올바른 지원 대상 선정과 사후 확인이 따르지 않으면 또다시 '눈먼 돈 잔치'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 기금 운영주체, 농어민단체 등이 협의체를 만들어 기금 조성과 지원 방식을 명문화하는 작업이 급선무다. 그래서 기금 효용을 높이고 허투루 쓰이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한중 FTA 혜택을 골고루 나눌 수 있는 지혜가 절실하다.

어렵지만 끝내 가야 할 길 '광주·전남 상생'

광주·전남이 민선 6기 들어 상생의 가치를 들었지만 단기간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안에 한정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공항 문제와 무안공항 이전, 연구개발특구 확장 등 핵심 현안들은 기존의 갈등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상생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광주와 전남이 합심해 치른 U대회 성공 개최와 광주전남연구원 출범, 제2남도대학 건립 등 일부 상생 과제들의 경우 비교적 순항한 셈이지만 상당수 과제는 성과가 내지 못한 채 동력을 상실한 듯 보인다. 대표적으로 빛가람혁신도시 에너지밸리를 광주연구개발특구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놓고 광주시와 전남도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는 현 특구 내 첨단지구, 신송지구 개발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지만 전남도는 관련 용역을 발주하고 전문가들로부터 의견 수렴에 나설 방침이라고 한다.

전을 통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광주전남연구원 원장 및 이사장 선임 등 민감한 사안마다 광주·전남 내부에서는 불협화음이 노출되고,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논의 구조에 뭔가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광주부터 상당 기간 누적이었던 사안을 정치적 부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장끼리 논의하고 결론 내는 현재의 '상생 방식'으로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도 공직자 중심의 논의 구조에 지역 내 여론주도층 및 전문가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미래 비전과 세부 단계 과제를 마련토록 할 필요가 있다.

광주와 전남은 29번째 행정적 분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역사적·정치적 정서나 생활권·경제권 등에서 모두 한 뿌리일 수밖에 없다.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광주·전남의 상생 협력은 긴 호흡으로 인내심을 갖고 끝내 함께 가야 할 길이다.

無 等 鼓

하얀 헬멧에 청바지와 청재킷. '백골단'은 1980년대 중·후반 대학을 다닌 학생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 검정 헬멧에 검은 옷을 입은 전투경찰이 대오를 갖추 시위대와 맞선 현장에는 어김없이 하얀 헬멧의 백골단이 있었다.

백골단은 전경 옆에 줄지어 서 있다가 시위대를 향해 에워싸며 돌진하는, 일명 '토끼몰이 식 제압'으로 악명을 떨쳤다. 1987년 6월 항쟁 당시 광주 금남로 일대는 대학생은 물론 '네티어 부대'까지 합류한 시위가 연일 끊이지 않았

백골단의 등장은 대학생들의 시위를 더 과격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 대학마다 소피아프로 무장한 시위대가 생겼는데 전남대의 '오월대'와 조선대의 '녹두대'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정보 수집을 위해 학교 내에 진입한 사복경찰을 체포해 지체 처벌을 가하기도 했지만 시위 현장에서 백골단과 맞서면 경쟁 상대가 되지 못했다.

백골단은 공권력을 기반으로 한게 없는 폭력을 행사했다. 급기야 1991년 4월에는 명지대생 강경대 군 폭행치사 사건을 일으켰고 이후 이진 전남대생 박승희 양 분신 등 '분신 정곡'을 불러왔다. 이들

'백골단'의 부활

은 1996년 대폭 축소되어 유명무실해질 때까지 시위대를 공포에 떨게 했다. 백골단은 2008년 촛불정국에 경찰관 기동대원 이름으로 부활했지만 예전처럼 검거 위주의 진압을 하진 않았다.

경찰이 오는 5일 서울에서 열리는 2차 민중총궐기대회에 백골단 같은 체포조를 투입하기로 했다고 한다. 대회 주최 측이 평화집회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체포조 투입을 예고하고 있다. 백골단의 부활을 반길 이는 없다. 있다면 정권의 불안감을 드러내는 사람들뿐일 것이다. /장필수 사회부장 bungy@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61482)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화사 업 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 화 생 활 부 2200-661	광 고 매 개 링 국 227-9600	독 자 서 비 스 국 2200-515
정 치 부 2200-642	여 론 매 체 부 2200-696	< F A X 227-9500 >	< F A X 227-9500 >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프 로 젝 트 팀 2200-555	< F A X 02-773-9335 >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